

올 수출 6800억 달러 사상최대... 무역규모 세계 6위 기업

제59회 무역의날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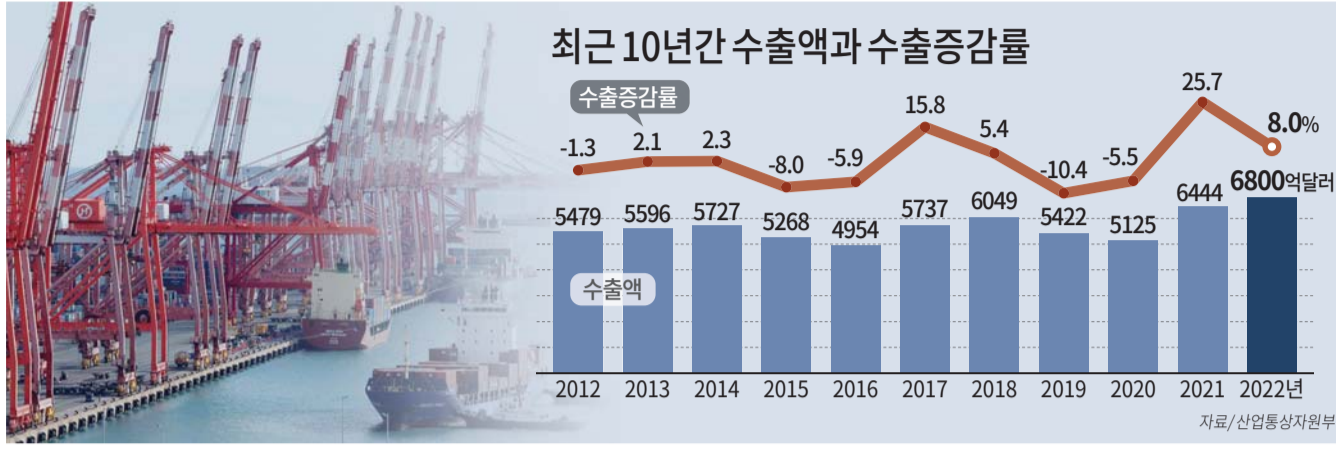
윤석열 대통령 “윈스톱 지원단 통해 기업 수출·수주 애로 신속히 해결”

구자열 무협회장 “수입규모 8위 에너지 절약으로 적자 개선해야”

올해 우리나라 수출액과 무역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세계 6위에 오를 전망이다. 세계 경기 둔화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무역적자 확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눈에 띄는 성과다.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2026년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잡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수출 기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서울 무역센터 코엑스에서 열린 제59회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수출로 정면 돌파하며 위기를 극복했듯이 복합의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수출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며 “제가 직접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와 함께 윈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와 관련된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이 하는 정상 외교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 이러한 정상 외교가 철저하게 우리 기업의 수출 촉진과 해외 진출에 초점을 맞춰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금년 우리 무역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크게 선전했다”며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역국 중 수출증가율 5위를 기록하며 수출은 2년 연속 6000억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세계 수출 순위도 작년 7위에서 6위로 올라설 전망”이라고 밝혔다.

구 회장은 “수입도 세계 9위에서 8위로 함께 증가하면서 우리의 교역규모는 작년 세계 8위에서 두 계단 도약해 사상 최초 6위를 달성할 전망”이라며 “우리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임을 감안할 때, 세계 6위 무역규모 달성은 무역강국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한 쾌거”라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무역수지의 적자 반전은 조속히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무역적자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지만, 국내 에너지 과소비 구조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과소비 구조를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운동을 확산해 간다면 무역적자 개선은 어렵지 않게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무역수지는 적자지만 올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실적은 양호해 수출의 탑 수상기업은 1780개사로 전년 대비 207개사 증가했다. 100만불 수출의 탑 수상기업도 전년 516개사에서 19개사가 증가한 535개사로 집계됐다.

일본이 장악한 글로벌 스위스터 자동차 선반 시장에서 국산화에 성공한 대성하이텍 최우각 회장이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고, 국내 중소기업 최초로 수명 60년의 원전용 케이블을 개발해 해외시장 개척에 성공한 서울전선 이장열 대표이사는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SK하이닉스 박찬동 부사장은 최근 2년간 낸드(NAND)마케팅을 담당하며

코로나19 팬데믹 및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고용량 멀티칩패키지(MCP) 점유율을 크게 높이는 등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최고액 탑인 1200억 불탑을 수상하며 작년 1100억불탑을 수상한지 1년 만에 기록을 갱신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디램, 낸드플래시, SSD, TV, 냉장고, 스마트폰, 휴대폰 등의 부문에서 세계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미국 태양광 모듈시장 점유율 1위를 확보하고 태양광셀 생산 글로벌 1위로 도약한 한화솔루션은 20억불탑을, 세계 최초로 니켈 함량 90% 양극재(NCM A) 양산에 성공한 엘앤에프는 10억불탑을 수상했다.

구 회장은 “미중 갈등과 러-우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위기,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우리 무역인들이 앞장서서 대응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선도해야 한다”며 “무역인 특유의 담대한 도전정신으로 세계 무역강국의 이상 실현을 위해 다시 한 번 뛰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노동계, 오늘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예고

정부,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 화물연대 업무복귀 여부 파악 나서

민노총화물연대, 처분 취소소송 청구 조퇴·휴가 등 수단 동원해 ‘총파업’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정유·철강 분야도 업무개시명령 초읽기에 들어가자 노동계는 6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예고하며 맞불을 놓았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화물연대가 화물차주에 파업 동참을 강요했는지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이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화물연대 파업에 개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대통령실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정유와 철강 분야에 추가 업무

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위한 제반 준비를 끝냈다. 산업별 피해 상황을 계속 지켜본 뒤, 운송 차질이 경제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정부가 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정유·철강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의결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화물차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서 이행 여부 파악을 시작했다.

명령서를 받고나서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운송 업무를 방해하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공정위도 이날 화물연대가 소속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하고, 운송을 방해했다면 ‘파업 담합’으로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

그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기 위해 6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파업은 정의권이 있는 사업장

은 연대 파업을 벌이고, 총회나 조퇴, 휴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이 투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지하철, 철도, 병원, 학교 비정규직 등 파업이 잇따라 철회되면서 전방위적 총파업은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화물연대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씨가 서울행정법원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 명령 처분의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헌법 및 국제규범을 위반했고,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인권위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행정권 발동이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기구의 협약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관련 긴급개입 절차



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요청서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에 나섰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핵심협약 중 하나인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ILO의 긴급 개시가 아닌 정부에 의견을 묻는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순한 의견 조화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정부는 화물연대 지지를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째로 접어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과 민주노총 총파업 등을 점검하며 “화물연대는 정부의 정당한 업무개시명령을 ‘강제노동’으로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운송 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물류 정상화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민생과 국민 경제를 불모로 한 총파업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투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에 장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금감원, 내년 IFRS17 도입 맞춰 신 지급여력제도 시행

자산·부채 산출기준 다르게 운용 보험사의 리스크 실질 반영 가능

내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에 맞춰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IFRS17 시행시기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국제 자본규제와 부합할 수 있도록 신 지급여력제도(K-ICS)를 마련해 시행을 준비해 왔다. 현행 지급여력(RBC)제도는 일부 자산 및 부채 원가평가를 기준으로 삼지만, K-ICS는 자산과 부채 산출기준을 다르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K-ICS는 일반회계와 감독회계를 구분해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별도로 정의하고,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연결재무상태표를 원칙으로 작성하되 보험사의 리스크 실질을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요구자본 산출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장수와 해지, 사업비, 대재해, 자산집중위험 등을 신규 측정 리스크로 추가했다. 정교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 위기상황 발생 시 충격 수준을 자산·부채 미래 현금흐름에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을 측정토록 충격시나리오법도 도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현장점검도 실시해 왔다. 신제도 도입에 대한 준비현황과 K-ICS 비율 산출 적정성을 주요

테마로 선정, 회사 임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실무기준 적용방식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금감원은 신 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험회사는 핫라인을 통해 IFRS17 적용 관련 애로·건의사항, 법령해석, 추가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메일을 통해 간편하게 질의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